‘빨라진 폭염’… 광주시, 맞춤형 시민보호 나선다

신체·사회·직업·경제 등 4개 분야 15개 유형 민감대상자 집중 보호
저감시설 785개·쉼터 1593곳
‘자연재난 사전대비 TF’도 운영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광주 북구청 안전총괄과와 중흥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북구 중흥동의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한 경로당에서 선풍기와 에어컨을 점검하고 폭염시 대처 방법 등을 어르신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광역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대응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4개 분야에 걸쳐 총 15개 유형의 폭염 민감대상자를 지정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집중 보호에 나섰다.

먼저 신체적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기저질환자에게는 생활지원사를 통한 일일 건강 확인과 냉방용품이 지원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영유아·임산부·고독사 위험자·군 복무자 등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농업인·외국인근로자·건설노동자·폐지수집자 등 직업적 민감대상에게는 폭염 예방키트와 ‘안전쉼터 쿠폰’ 등을 제공하고, 드론을 활용한 예찰과 축산·공사현장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또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자원재생 활동단’도 8월 한 달간 운영해 대체 일자리와 폭염 보호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노숙인·쪽방주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냉방용품, 응급쉼터 등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그늘막, 쿨링포그(물안개 분사장치) 등 폭염 저감시설 785개 △무더위쉼터 1593개를 운영중이며, 냉방비와 살수차 운영비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개월간 노후 건축물, 교량, 어린이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498곳을 집중 점검하고, 276곳에 대해 보수·보강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자연재난 사전대비 TF’를 구성해 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참여형 합동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안전 강화 기조에 발맞춰 예측할 수 있는 재난은 반드시 막겠다는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지역과 세계 잇는 ‘K-교육’ 전남에서 꽃피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3주년 기자회견
글로컬 작은학교·직업교육 모델
현장 지원·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침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3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직선 4기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라남도 교육청이 주민직선 4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앞으로 1년 동안 지역과 세계를 잇는 ‘K-교육’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K-교육’은 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둔 세계시민교육과 공생의 철학을 담은 생태환경교육,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아우르는 전남교육의 전략적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원 기초정원제와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거점 국립대 육성에도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전남 고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사업도 본격화된다. 전남 식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전남K-푸드교육센터’가 2028년 곡성에 들어서고, 다문화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글로컬 다문화 통합교육센터’,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를 실현할 ‘글로컬 K-교육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또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남형 글로컬 작은학교 모델’을 도입해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경쟁력을 키운다. 2026년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지역산업 인력 양성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직업교육 특화 모델로 육성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습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직업교육 혁신도 핵심 과제다. ‘신(新)장인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선취업-후학습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산학 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기술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형 인재를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에는 ‘2025 글로컬 전남교육작은 박람회’를 열어 전남형 교육 혁신을 공유하고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한다. ‘글로컬 교육콘퍼런스’와 ‘2030수업축제’, ‘교육 성과나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학교 현장 지원 강화도 주력한다. 각 시군 학교종합지원센터가 현장체험학습, CCTV 운영 등 학교의 부담이 컸던 행정업무 23건을 전담하고, 본청 조직을 감축해 확보한 31명을 학교에 배치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잦은 지역에는 맞춤형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김 도교육감은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고, 현장 중심 정책으로 전남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 교육으로 지역에 희망이 살아난다면 세계 인재들이 전남을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지만원, 나를 간첩이라고 주장…말도 안돼”

5·18 북한군 개입설 손배소송
차복환·홍흥준씨 증인으로 나서
다음 변론 기일 8월21일 예정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친 지만원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차복환씨와 홍흥준씨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진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는 3일 오후 법원 별관 209호에서 5·18기념재단과 차씨, 홍씨 등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지씨는 지난 2023년 1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통해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 300명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사건을 왜곡·폄훼한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받고 있다.

차씨와 홍씨는 이 서적에서 각각 북한 특수원 ‘광수1호’와 ‘광수75호’로 지목된 시민군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올해 1월 해당 서적의 출판·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고, 전국 서점과 도서관에서의 유통을 금지시킨 바 있다.

증인들은 재판에서 피고인 지씨 측이 제기하는 ‘당시 사진’을 근거로 한 북한군 개입 주장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김군’ 속 인물로 특정된 차씨는 “지씨의 주장으로 인해 간첩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차씨는 “나는 간첩이 아니다. 지씨가 영화 ‘김군’까지 끌어와 나를 북한군 김창식, 광수1호로 몰아세우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에 등장한 내 행적도 잘못 기록돼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북한 인물과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씨도 “지씨가 제 사진을 근거로 북한 정치인 리선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당시 사진 속에 입고 있던 옷도 수십 년간 보관하다가 재단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지씨측 변호인은 “피고는 차씨를 김창식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고, 차씨가 김창식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지씨측은 영화 ‘김군’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차씨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지난해 5월 제기했다. 5·18 왜곡과 폄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을 8월21일에 이어갈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

‘무자격 수의계약 의혹’ 목포시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자격이 없는 업자와 수의계약한 의혹을 받는 목포시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A씨 등 목포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근무하고, 목포시가 발주한 교통시설 설치 공사를 관련 면허가 없는 B씨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과 B씨 사이에 불법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광주 요양병원서 입소자에 흉기 휘두른 70대 체포

광주광역시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광주 북부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10분께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요양병원 입소자인 B씨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멱살을 잡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안면부에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승우 기자